

더 큰 공존으로

서평: 『잡종사회와 그 친구들: 아나키스트 자유주의 문명전환론』, 김성국(이학사, 2015)

김상준(경희대 공공대학원)

1. 한 장면

이 책의 저자 김성국 교수를 생각할 때면 꼭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다. 때는 2007년 7월, 중국 후난성 장자지에(張家界) 깊은 산중 어느 한 호젓한 객가의 저녁. 한국 사회학자 7-8명이 근처 창사에서 열린 제17회 중국사회학 연회(年會)에 참석한 후 후속 학술 계획을 논의하고자 모인 자리였다. (나만 빼곤 모두 당시 한국사회학계의 ‘현역원로’라 할 수 있는 60년대 학번 분들이었다.) 기름진 중국요리에 반주로 독한 중국백주를 아주 조그만 잔에 훌쩍 훌쩍 곁들이고 있었다. 논의 중 이견이 생겼고 몇 가지 선택지 중 결정을 내려야 할 대목에 이르렀을 때였다. 분위기가 좀 썩늘었다. 이때 김성국 선생이 조용히 허리를 펴 자세를 바로 잡더니 큰 유리잔을 하나 주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독주를 천천히 가득 채웠다. 그 잔을 한 손으로 잡고 가볍게 만지작거리면서 말문을 떼기까지의 단 몇 초. 그 순간이 왜 그리 긴 것 같았고, 잔을 잡은 그 손은 왜 그리 솔뚜껍만큼이나 크고 두툼하게 느껴졌는지. 그리고 이어졌던, 결코 길지 않았고 또 결코 달변으로 들리지는 않았던 저자의 발언이 왜 그리 이상하게 힘 있고 설득력 있게 느껴졌는지.

그때 나는 어떤 하나의 레전드의 비밀을 엿본 것 같았다. 사회학계, 그 중에서 60년대 초중반 학번에서 70년대 초중반 학번까지의 사회학자 중 저자의 위치는 특별하다. 많은 학회 창립의 중심에 저자가 있었다. 한국지역사회학회, 한국이론사회학회, 한국아나키즘학회, East Asian Sociologist Network, 한국동아시아사회학회, 한국해양사회학회 등. 심한 말로 뭐 세 마리 한 줄로 세우는 것보다 교수 세 사람 한 줄로 세우는 것이 어렵다고들 하지 않는가. 그런데 김성국 교수의 어떤 점이 그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성향의 교수, 학자들을 끌어 모아 그렇듯 여러 학회를 창립하고 또 그 학회들을 무리 없이 잘 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일까. 저자보다 15년이나 후학인데다, 2000년대 들어서야 직접 뵈고 학회활동을 시작했던 평자로서는 그 비밀을 늘 알 듯 모를 듯하였는데, 그날 그 순간 아하! 하고 그 비밀의 한 가닥을 엿본 듯 느꼈던 셈이다. 가득찬 독주잔을 잡았던 그 손이 솔뚜껍만큼 크다고 느끼게 만드는 어떤 힘, 모종의 완력(腕力)이랄까? 특유의 친화력, 흡인력, 그리고 카리스마를 보았다.

그렇듯 저자는 사람을 주위에 모으고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중평(衆評)을 받아왔다. 사회학자이기 이전에 이미 매우 사회적이고(sociable), 사회적 관계형성에 뛰어난, 대체로 학자들 사이에서는 매우 드물게 보이는, ‘조직가적인 천품’을 타고 났다. 그렇기에, 그리고 정확히 바로 그런 만큼, 이번 출간된 이 책은 그를 잘 알고 있던, 그와 함께, 그리고 그를 따라 같이 활동해 왔던 여러 동료 학자들에게 놀라움을 주었다. 연대, 연합, 네트워크, 조직, 공동체. 사회학에서 전통적으로 중시해 왔던 토픽들이고 저자의 기왕의 모습과 평판에 부합하는 사회학적 개념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책에서 저자는 거대한 중심이동을 보여

준다. 새로운 중심은 이제 사회, 연대, 조직 등이 아닌 개인, 오직 개인이다. 그 표현 역시 에 두르지 않고 매우 직설적이다. "유일자로서의 내가 없으면, 세상만사와 만물의 의미도 없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겠지만, 그것은 나에게는 의미 없는 세상이다"(206). 그렇다 보니 저자와 수십 년 동안 가까웠던, 그리고 저자와 몇 대 차이를 두고 후임 한국사회학회 회장을 역임했던 한 후배 교수는 한 서평회에서 지극히 퍼스널한 언어로 "형님처럼 많은 조직을 하시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신 분이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만이 중요하다고 하시니... 당황스럽습니다"라고 하였다. 저자와 오랫동안 가까웠고 저자를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들의 공통된 심정의 일단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 평을 쓰기 전, 평자는 이 책에 대한 두 차례의 서평회에 참석하였다. 2016년 2월 27일 한국이론사회학회의 3토(土) 모임, 그리고 동년 3월 16일 아산정책연구원 제7회 아산서평모임이었다. 각 20명 내외가 참석하였는데, 2월에는 전원 사회학자들, 3월 모임에는 정치학자와 사회학자들이 참석했다. 2월에는 사회학자 김영범 교수가 대표토론을 하였고, 3월에는 정치학자 강정인 교수, 서병훈 교수가 대표토론자로 나서주었다. 양 모임 모두 참석자 전원이 활발한 발언과 토론을 해주었다. 따라서 이 서평은 평자 개인의 평이기 이전에 그 두 모임에 참석했던 여러 분들의 토론내용의 귀동냥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2. 자유주의

이 책은 크다. 900여 쪽에 달한다. 큰 건 쪽 수만이 아니다. 슈티르너, 포퍼, 하이에크에서 노장, 음양5행과 '천지인'까지 동서와 고금, 그리고 하늘과 땅을 자유로이 소요(逍遙)한다. 이 모두를 혼효(混濛)하여 이 모두를 관통하는 잡종=hybrid를 창출하겠다는 포부다. 웬만한 사람은 들어가 방향을 잃고 어디가 어딘지 까맣게 헤매기 십상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무어라 한들 결국 코끼리 발가락 더듬기밖에는 안 될 것임을 절감한다. 어차피 그렇게 될 것이라면 욕심을 버리고 그 발가락 하나라도 제대로 이야기해 두자는 생각이다.

나에게는 이 책이 자유주의에 관한 논변으로 읽힌다(서병훈 교수도 이런 관점에서 토론했다). 개인과 아나키즘이 자유주의를 중심항으로 양측에 배치되어 있다. 주지하듯 개인과 아나키즘은 깊은 연관이 있다. 그런데 어떤 개인이냐에 따라 아나키즘도 둘로 나뉜다. '유일자적'(슈티르너) 개인이라면 노직류의 소유적·최소국가적 아나키즘으로 되고, 연대적 개인이라면 크로포트킨류의 공동체적·연합체적 아나키즘이 된다. 저자는 크로포트킨류의 아나키즘을 분명하게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일견 저자의 입장은 노직류, 그리고 미제스-하이에크와 가까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저자는 미제스-포퍼-하이에크에 대한 긍정적 수용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저자는 현대 중국 체제의 '잡종화 능력'에 대해 '변론'에 가까울 만큼 긍정적인 평가와 기대를 하고 있고("서구식 자본주의, 서구식 민주주의, 그리고 서구식 사회주의보다 더 낫거나, 적어도 그만큼은 되는 새로운 유형의 중국식 문명 창조도 가능하다"[540]), 이러한 평가와 기대의 배경에는 동아시아 전통가치에 대한 적극적 평가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대목이다(이 점은 강정인 교수가 제기했던 논점이기도 하다).

제대로 된 부모, 선생, 상사, 선배는 모두 자식, 학생, 부하, 후배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사회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진 권위와 힘 그리고 사랑과 애정을 사용해야 하는 것 ... 우리는 다시 저 따뜻한 부모 자식관계, 훈훈한 사제지간, 부드러운 상하 관계, 아름다운 선후배 사이를 회복해야 하고, 또 회복할 수 있다. 권력과 힘, 지위와 서열, 연륜과 지해 등 이 모든 권력 자원을 자신을 포함한 타인의 자기 고양과 자기 성숙, 그리고 자기실현을 위한 능력으로 제공하고 사용할 수 있다(817-8).

물론 이런 인간관계들이 동아시아의 것만은 아니다. 보편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동아시아에서 그러한 관계들의 가치에 오늘날까지도 좀 더 특별한 문화적 비중을 두어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동아시아적 특성은 존 로크가 강조했던 '별개적 개인(punctuated individual)'과는 다른, 개인성은 상호 결부된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고 하는 '연계적 개인'¹⁾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계적 개인'에 대한 긍정은 다른 곳에서 저자가 강조한 크로포트킨류의 연대적 개인-공동체적 아나키즘에 대한 강렬한 부정과 딱 맞게 부합(符合)하지 않는다.

결국 저자의 개인-아나키즘의 양 향 자체가 상당히 '잡종적'으로 혼효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그 결과 그 양 향의 중앙에 위치한 저자의 '자유주의' 역시 그러한 잡종성, 또는 혼효성을 띠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혼효는 평가가 보기에 하이에크적 자유주의와 롤스적 자유주의의 잡종화다. 이는 저자가 제기하는 '탈권력적 사회국가'의 아이디어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탈권력적'은 하이에크 쪽에, '사회국가'는 롤스 쪽에 방점이 가 있다.

이 둘은 혼효 가능한가? 흥미롭게도 선배 쪽인 하이에크 쪽에서 롤스의 첫 저서이자 출세작인 *A Theory of Justice*(1971)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그의 후기 주요 저서에 속하는 『법·입법 그리고 자유주의 II』에서다. 하이에크는 젊은 롤스의 초기 논문 발표 시절부터 그를 인정하고 높이 평가했던 듯하다. 그러나 롤스는 하이에크가 평생 부정해 왔던, '정의' 또는 '사회정의'를 필생의 주제로 삼고 천착했다. 하이에크로서는 당혹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결국 롤스를 정면으로 비판하거나 논적으로 삼지 않았다. 대신 둘 사이의 차이는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용어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얼버무리며 넘어갔다(상동:205-206). 세계적인 논쟁가인 하이에크의 이런 태도는 극히 예외적인 것이어서 상당히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양 축으로만 놓고 본다면, 이 책의 자유주의는 하이에크보다는 롤스의 정신에 더 가까워 보인다. 앞서 말했듯, 현대 중국의 체제에 대한 저자의 우호적 태도에서 그것을 본다. 하이에크라면 현재 중국경제계에서 일부 흐름을 이루고 있는 시장만능주의적(market fundamentalist) 경향을 고무했겠지만, 혼합경제의 전체 상태에 대해서는 빗날볼상용의 것이 섞여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정치체제는 가차 없이 해체해야 한다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반면 롤스라면 현재 중국의 혼합경제체제에 대해 긍정적인 실험이라고 평가했을 것이고, 정치체제에 대해서는 현 상태가 이상적이거나 바람

1) 이걸 '유일자적' 또는 '별개적' 개인도 아니고, '연대적' 개인과도 다르다. 주역 괘(卦)의 효(爻)들이 서로 얽혀 있는 것과 같은 연계다. 고정적이지 않다. 상변하고, 탄력적이다.

직한 것은 아니지만 ‘자애적 절대주의(benevolent absolutism)’으로 보아 ‘만민법’의 질서 내에서 공존가능하다 하였을 것이다. 어느 모로 보나 저자의 주장은 롤스의 것에 훨씬 친화성을 가지고 있다. 아니, 롤스보다 오히려 롤스적이다.

3. 더 큰 공존으로

김영범 교수는 논평을 통해 이 저작이 매우 포용적인 외양을 지니고 있음에도, 그 내부에는 선명한 거부대상과 반대전선이 존재함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거부감이 연대, 공동체, 집단, 국가권력 등의 개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이는 저자의 강렬한 ‘반공주의’로 집약된다. 이 강렬성이 그의 자유주의의 실내용이 사실은 롤스적인 것임에도 그 외적 틀, 형식을 하이에크적인 쪽으로 강경하게 비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50년대나 1960년대 한국에서 반공주의 이념과 반공 체제의 구축은 당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소련의 전체주의적 공산주의와의 대결이라는 국제적 상황과 한국의 적대적 분단 현실을 고려할 때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이념적 선택이었다 … 한국에서의 반공 체제 구축의 역사 구조적 당위성과 필요성에 입각한 ‘공산독재주의에 대한 반대로서의 반공주의’와 세계적 냉전 체제의 현실적 산물인 한국의 반공 체제를 등에 업고 지배자들이 자신의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서 악용한 ‘독재 정권 유지용 반공주의’는 같은 이름이지만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공주의에 대한 무차별적 반대가 불시에 공산주의 독재를 정당화시키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민한 대응일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반공주의는 이 민주화 시대에 척결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부르짖을 때는 그가 공산주의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직설 화법으로 대답해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아나키스트 자유주의에게 전체주의적 공산 독재에 대한 반대, 즉 반공은 양보할 수 없는 전선이다. (331-332)

이론적으로 공산주의와 마르크스-레닌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을 비판하는 것은 동구권붕괴와 소련해체 이후 20여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충분히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이에크만이 아니라 롤스의 저작에도 충분한 비판의 함의가 담겨 있다. 그런데 위 인용을 보면, 그런 선을 넘어서는 필요 이상의 과도한 경계가 드러난다. 저자는 ‘이론적 반공주의’와 현실정치 역장(力場) 속에서 폭력의 수단으로 작용했던(그리고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독재용 반공주의’를 구분하자고 했지만, 막상 “그가 공산주의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직설 화법으로 대답해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대목에서는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

한국 현실에서 이러한 논법이 누구에 의해, 어떤 의도로,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저자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그렇다. 누구든, 어떤 경우든 이런 방식으로 “직설화법으로 대답해줄 것을 요구”받은 측은 상대가 자신의 양심의 자유를 강압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느낄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자유주의와 어울리지 않는다. 하이에크조차 과연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 이러한 논법에 찬성할 것인지 나는 회의적이다. 이는 (하이에크와 롤스가 모두 공유할)

자유주의의 근본신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법이 저자 자신의 중국에 대한 논의와 전혀 부합하지 않고, 적용할 수도 없다는 것 역시 자명하다. 이 모순, 불일치, 곤경의 근원이 무엇일까? 좌나 우나 현실에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는 통일에 대한 강박감(나는 그것을 ‘분단체제의 반복강박’이라 부른다), 그리고 그에 대한 우려가, 저자를 어떤 또 다른 극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험천만한 판국이 남북한 분단의 상황이다 … 나는 개인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어떠한 통일도 바라지 않는다. 통일 지상주의는 수용하지 않는다 … 21세기 탈근대 시대에 부국강병의 국가건설주의나 자민족 중심의 민족주의에 입각해 근대적 의미의 남북통일국가를 (조기)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매우 비판적인 동시에 비관적이다. 남과 북은 통일이 아니더라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여 서로 도우며 공존할 수 있다 … 최근의 통일 대박론은 허장성세의 정치적 수사처럼 들릴 뿐이다. 온갖 통일꾼 혹은 통일의 일꾼들이 장기적 비전이나 목표(예컨대 평화, 자유, 안전의 가치 등) 대신에 단기적인 경제 효과에 급급하여 광분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선다. (334-335)

평자는 이 진술에 상당히 공감한다. “남과 북은 통일이 아니더라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여 서로 도우며 공존할 수 있다”는 대목이 특히 그렇다. 한발 더 나아가 나는 현재의 남북이 서로가 불안정한 ‘분단체제’가 아닌, 모두가 정상상태가 될 ‘양국체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이나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의 취지부터가 그랬다. 이것이 ‘말만’이 아니라 실제 현실로 돼야 한다고 믿는다. 누군가 나의 이런 말을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발언’이라고 맞받는다면 (옛날에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익숙한 말이다) 난 그저 웃겠다. 별로 대응할 필요가 없는 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듯 평자나 그리고 아마 저자도 틀림없이 동의해 주실 것 같은 이러한 상태에서도 상대 체제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직설 화법으로 대답해줄 것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돼야 할까? 아닐 것이다. 서로가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 ‘평화체제’ 그리고 ‘양국체제’가 목표하는 지점이기도 할 것이다. 지금 세계의 상황을 보면 이런 문제가 전혀 무의미해졌음을 알 수 있다. 지금 한국과 북한 빼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 “어느 체제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직설 화법으로 대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결국 저자와 필자 사이에 목표하는 바, 지향하는 바는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저자가 어느 곳에선가 ‘시대와의 불화’라고 불렀던, 그의 87 민주화 이후의 상황에서 급진운동권과의 논쟁과정에서의 불화가 오늘날까지도 연장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해 본다. 그때와 지금은 또 상황이 크게 다르다. 이제 과거의 불화는 좀 묻어도 되는 때가 아니겠나 싶다. 그렇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공존’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